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총평

난이도 (중): ★★☆☆☆

이번시험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경찰학은 각개전투다.” 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출제였습니다.
2. 대부분의 문제는 기존의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도가 많이 엿보인 출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출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학의 전반적인 이해 또는 응용력을 요하는 출제와

경찰관으로서 알아야 하는(숙지해야 할)부분은 암기문제로

적절한 출제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오래 한 수험생이 유리한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수험기간이 짧은 수험생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보여 집니다.

수업시간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전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출제가 될 것이고

사례형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농후 하다고 했습니다.

경찰학은 각개전투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 주시고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응용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뵈겠습니다.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옳음.

④ 틀림.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라는 것은 위생사무를 의미 하는 것이다. 프랑스지방자치법전(1884)은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법과 판례 (정진천 기출해설773 발췌)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794년)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그의 개개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10조 2항 17호) ⇨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
죄와 형벌법전 (경죄처벌법전) (1795년)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 을 보호함(소극 목적에 한정)을 임무로 한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행정경찰이라는 용어가 유래됨
크로이츠 베르크판결 (1882년)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의 전승기념비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베를린경찰청장의 명령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무효라고 하여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 ⇒ 경찰작용의 목적축소 와 관련
지방자치법전 (1884년)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 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년)	"경찰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 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규정 ⇒ 경찰의 직무범위는 소극 목적에 한정 한다는 경찰의 개념이 확립

02.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설)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2채용]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현행	개정안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u>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u>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u>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u>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썩은 사과 가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③ 형성재론 ④ 구조원인 가설

[정답] ②

[해설]

- ② 옳음. 서면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gratuity)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제한규정에서 금지규정으로의 개정안은 위 가설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03.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③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②③④ 옳음.

0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2채용]

- ①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종류에는 '협회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 ㉠ 틀림.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 ㉡ 틀림.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옳음.

■ 훈령의 종류

협회의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 시	상급기관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 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일일명령	당직, 출장 등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05.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2제용]

-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 ②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진다.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1991년 「경찰법」 제정이전은 치안본부였고 치안국은 치안본부 이전의 체제 이다.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야 옳다.
- ② 옳음.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지)를 준용한다.(경찰법 제8조)

- ③ 틀림.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경찰법 제17조 ③)
- ④ 틀림.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②)

06.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9'2제용]

- 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법령준수의무)
- ②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복종의 의무)
- ③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 의무)
-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직장이탈금지)

▣ 경찰공무원의 의무 개관

의무	국가 공무원법	선서의무(제55조), 성실의무(제56조)	일반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제65조) 비밀엄수 의무(제60조)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청렴의무(제61조) 영예 등의 제한(제62조)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신분상 의무
	경찰	법령준수의무(제56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무전념 의무(제58조, 제64조)★ 직장이탈금지(제58조) 영리업무종사금지(제64조) 검직금지(제64조)	직무상 의무
		제복착용의무(제20조1항),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공무원법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 의무(제18조 제1항), 지휘권남용금지 의무(제19조), ☆ 직무유기금지 의무(제19조)★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제9조)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제10조)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제8조)☆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 · 공개의무(제3조, 제10조)	신분상 의무

07.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 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틀림.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하며 제3자의 승낙은 허용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③④ 옳음.

■ 책임의 원칙 (정진천 실무종합 경찰 책임의 원칙 일부 발췌)

경찰책임의 원칙	의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u>책임이 있는 자에게만</u>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 ⇒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 가능.
	책임의 판단	자신의 생활범위(지배범위)로부터 경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u>객관적·외형적 상태에 의해서만 판단</u>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국적,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행위능력·책임능력, 정당한 권일 유무 등 불문.
책임의 종류	행위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한 경찰 위해에 지는 책임. ⇒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 이다. 예) 교통사고를 낸 자의 구호책임, 공원에서 유아에게 소변을 보게 한 보호자의 책임.
	상태책임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 예) 무너진 축대의 소유자, 오염된 토양의 소유자
	복합적 책임	하나의 위해가 다수인의 행위나 다수의 물건의 상태에 의해 발생했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에 기인한 경우. 예) 주유소 운영자와 토지의 소유자
책임의 경합		위험방지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찰위반 상태를 가장 신속히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찰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과잉금지 원칙)
경찰 책임의 예외 (경찰긴급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하여 질서위반과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가 인정된다. 예) 수난구호를 위한 징용, 화재현장에 있는 자에 대한 소화작업 동원 등. ⇒ 급박성, 보충성, 제3자 중대법익 침해불가 , 손실보상, 법적근거의 요건을 갖춰야 함 .

0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속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 조정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정답] ①

[해설]

- 틀림.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 ②③④ 옳음.

09.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옳음.

- ④ 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국가재정법 제32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

■ 국가재정법

예산안의 편성 (제32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3조)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립과정(예산편성절차)상 분류 -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준예산

본예산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②) ②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 → 정상적인 편성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초로 확정된 예산. → 본예산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할 때에는 이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사용된다.
수정예산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35조) →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등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추가경정예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6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발생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하는 예산안을 의미. ⇒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정예산안”과는 다르다.
준예산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②)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제54조③)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불성립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부여해서 예산의 불성립으로 인해 행정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 채용]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③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 ④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을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② 옳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 ③ 옳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④ 옳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	--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회의 설치 (제7조)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4조)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을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 권의 행사 (제15조)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 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GWP 경찰학원 / WILLBES 경찰간부학원 경찰학개론 / NEO 고시뱅크(경위, 경감)실무종합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합리적 선택이론 (클락 & 코니쉬)	의 의	합리적인 범죄자를 전제로 범죄자는 범죄를 결행할 때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범죄의사를 결정한다는 이론(신고전주의)	
		내 용	합리적 범죄인 가정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 . ⇒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 를 저지름
			비결정론적 인간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비결정론적 인간관 을 전제. ⇒ 고전주의의 영향
			범죄예방 대책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적
	일상활동이론 (코헨 & 펠슨)	의 의	사회구성원의 일상행위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여 여성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증가하여 그만큼 범죄발생도 증가함	
		내 용	①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과 범죄기회를 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② 모든 개인을 정상적인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하고 범죄를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봄. ③ 범죄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범죄발생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실제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함. ⇒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분석(x)	
			범죄발생 3요소	범죄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 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봄 ⇒ 암기: 3 범 대상 감
	범죄패턴이론 (브랜팅햄)		VIVA model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 을 들고 있다. ⇒ 암기: 가시 접근 이동(용) 가치
			① 범죄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 이 있음. ②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다음 범행지역을 예측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으로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 등의 해결에 도움을 줌	

12.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19'2채용]

-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 ②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④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 ② 옳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7.9.30. 97도1873).
- ③ 옳음. **유 단 노 비 무도 게임 복 성 경 전 사 ^^**
- ④ 틀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는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판2004.2.12. 2003도6282).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③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된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 ② 옳음. (동법 제3조 제3호)
- ③ 틀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동법 제6조)
- ④ 옳음. (동법 제60조)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4. 다음 중 무면허 운전해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2채용]

- ①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甲이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②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③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丙이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④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丁이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10톤 미만이다.
- ②③④ 옳음.

▣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이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 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 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 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시보 한테 시비결면 씹힌다. / 사람-이하, 무게 미만)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1. 총중량 3.5톤 이하 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철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허	건인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축차부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5. 정보의 배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19'2제용]

- ㉠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 필요는 없다.
- ㉡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정보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결정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 ㉤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① ㉠(X) ㉡(X) ㉢(O) ㉣(X) ㉤(O)
- ② ㉠(X) ㉡(O) ㉢(O) ㉣(O) ㉤(X)
- ③ ㉠(O) ㉡(O) ㉢(X) ㉣(O) ㉤(O)
- ④ ㉠(X) ㉡(O) ㉢(O) ㉣(X) ㉤(X)

[정답] ②

[해설]

- ㉠ (X) 정보배포(dissemination)단계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
- ㉡ (O)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O)

㉡ (O)

㉢ (X) 정보의 배포 순위는 정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정보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즉 정보는 **먼저 생산되었다고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배포(dissemination)단계 (정진천 실무종합 일부발췌)

의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 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
목적	①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 ② 정보생산자의 정보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배포시기	정보의 최종사용자가 정보를 언제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됨.
고려사항	① 해당 정보와 관련된 정보상황이 변화하기 이전에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최종사용자가 배포된 정보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등의 판단을 거쳐 정책결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 최종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배포는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정보의 배포 순위는 정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정보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 정보는 먼저 생산되었다고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배포의 원칙

필요성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알려서는 안됨
적당성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
보안성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적시성	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되어야 함
계속성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계속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함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② 옳음. (동법 제9조의2 ①)
③ 옳음. (동법 제12조)
④ 틀림.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7.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19'2채용]

- ㉠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① ㉠(X) ㉡(O) ㉢(O) ㉣(X) ㉤(O)
② ㉠(O) ㉡(X) ㉢(O) ㉣(O) ㉤(X)
③ ㉠(O) ㉡(O) ㉢(X) ㉣(X) ㉤(O)
④ ㉠(X) ㉡(O) ㉢(O) ㉣(X) ㉤(X)

[정답] ①

[해설]

- ㉠ (X)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국적법 제5조 제1호)
㉡ (O) (동법 제5조 제1의2호)
㉢ (O) (동법 제5조 제2호)
㉣ (X)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있을 것(동법 제5조 제3호)
㉤ (O) (동법 제5조 제6호)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19'2채용]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A-(㉠),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F-(㉢),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단순 노무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	㉣
①	2	D	6	E
②	2	E	4	F
③	1	E	6	F
④	1	D	4	E

[정답] ④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련)

외 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공 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유 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9.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채용]

- ①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 ④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경찰법 제3조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 ② 틀림.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다.
- ③④ 옳음.

20.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2채용]

-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지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 ㉢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화엄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군 방어진이 뚫린 상황에서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①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 ② ㉠ 김원봉 ㉡ 안병하 ㉢ 최규식 ㉣ 정종수

【경찰학개론】 19' 2차 공채 해설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③ ㉠ 김구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④ ㉠ 김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정답] ①

[해설]

■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정진천 실무종합 발췌)

민족의 사표 김구선생	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②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호국경찰의 표상)	①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종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차일혁 경무관 (호국·인권·문화 경찰의 표상)	① 빨치산 토벌 당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됨 ②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적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통),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여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
안병하 치안감 (민주·인권 경찰의 표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한 민주경찰·인권경찰의 표상.

고생하셨습니다.^^

